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2018~2022) 주요 내용

황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용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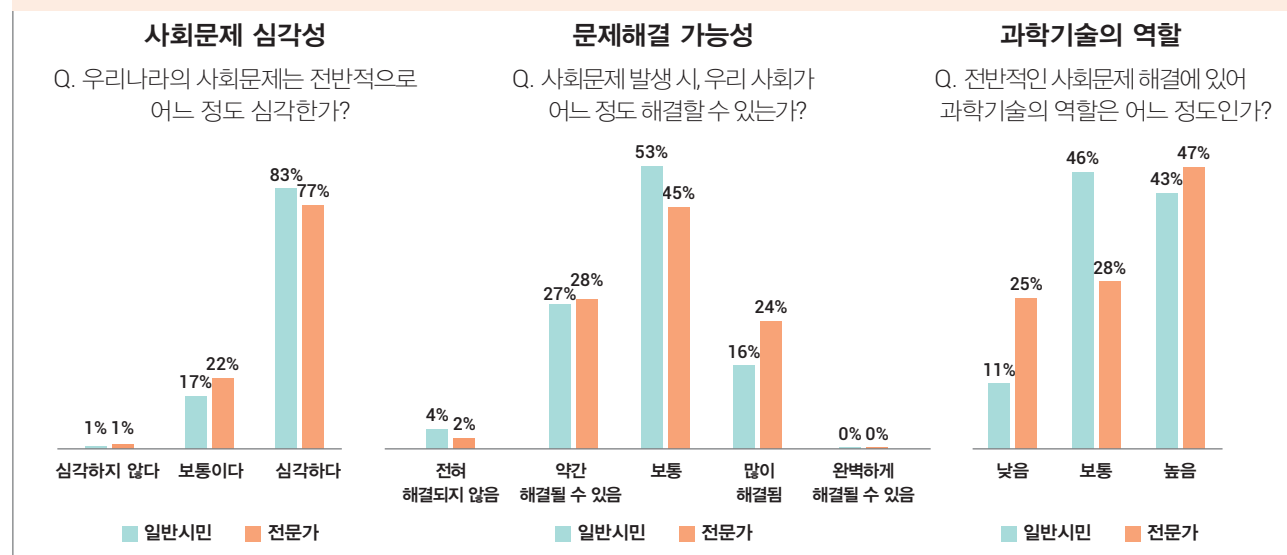
이새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시민과 전문가 의견¹⁾을 살펴보다라도, 우리나라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나 문제해결 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인식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표1>.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구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지난 2018년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확정한「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2018-2022) (이하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1〉일반시민, 전문가 대상 설문 결과

- (심각성)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일반시민 83%, 전문가 77%)
- (문제해결 가능성) 보통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일반시민 45%, 전문가 48%)
- (과학기술의 역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보통 이상이라는 의견이 다수(일반시민 89%, 전문가 75%)



1) 일반시민 1,000명, 전문가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2018.3)

1. 개요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3년 12월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2014~2018)(이하 ‘제1차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립하게 되었다. 추진 근거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본 계획은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점검을 거쳐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문제해결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정책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포함한다.

2. 제2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설정

가. 제1차 종합계획의 시사점 반영

제1차 종합계획 추진 과정과 결과 검토를 거쳐 제2차 종합계획의 기본 수립 방향을 설정하였다. 2013년 12월 수립된 제1차 종합계

획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²⁾가 마련되었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30개 사회문제영역이 설정되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10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과 과제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일부 제품과 솔루션이 개발되고 시범 적용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종합계획은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보다는 중앙부처와 연구자가 주도한 기술개발 중심이라는 평가가 강했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연계가 미흡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국민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영역 확대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문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분석,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생활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연관된 이슈를 발굴하였다. 이어서 관련 부처·지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영역을 개편하였다³⁾.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 ‘사회구조의 급변과 생태계 문제 심화’, ‘초연결사회·자아중심사회 도래’의 주요 생활환경 변화와 함께 관련 세부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영역에 기존 30개 이외에 미세먼지, 지진, 소방안전 등 심각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 10개 사회문제가 추가되었다.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정의〉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 또는 감소시키거나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의 원인 및 현상 규명부터 문제해결까지 기여하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R&D의 최종 성과물로서의 제품·서비스를 창출하고 사회적 활용과 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2) 「과학기술기초법」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14년 5월)

3) 사회문제영역을 40개 사회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신규 사회문제 추가 예정

〈표2〉 생활환경 변화와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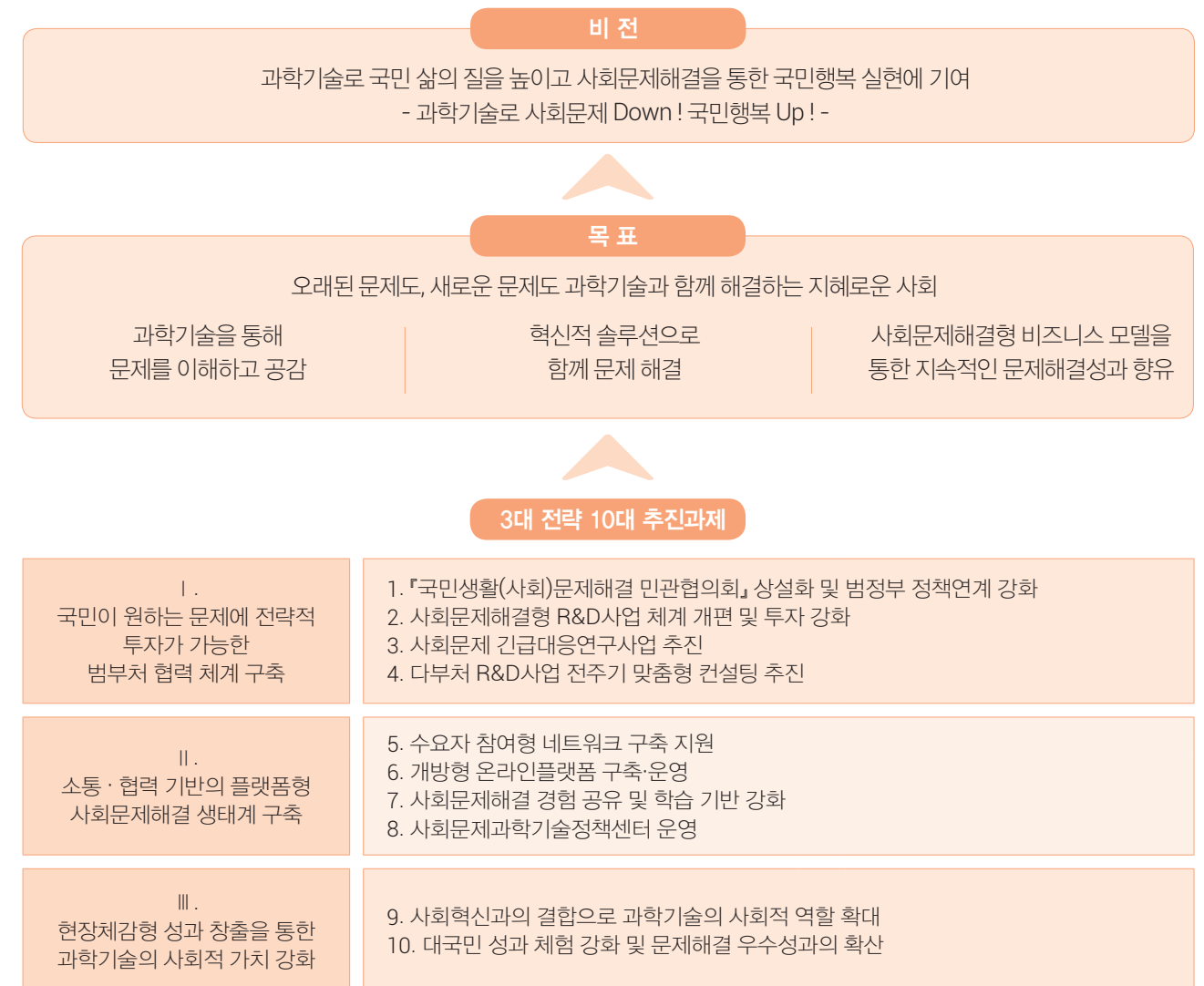
※ 신규 10개 사회문제는 굵은 글씨로 표시

3. 주요 전략과 추진과제

가. 비전 및 목표

제1차 종합계획의 점검과 함께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전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이 그동안에는 경제성장의 수단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국민행복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에도 균형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 목표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혁신적 문제해결 솔루션을 통한 문제 해결, 지속적 문제해결성과 향유의 3대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나. 전략 및 추진과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 1〉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국민이 원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범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의 상설 운영 등을 통해 범정부적 정책조정과 지원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형 R&D사업 개편을 통해 정부R&D 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R&D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과제 1〉『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상설화하고 범정부 정책연계를 강화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상시 운영한다. 본 협의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이다. 국가 현안이 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슈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범부처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나 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

민이 기술개발 성과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실증 R&D사업을 강화하고 지자체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과제 2〉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를 강화한다.

첫째, 기술개발과 실증을 결합한 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① 다부처 R&D사업<표3>, ② 특정 사회문제, ③ 지역 단위 리빙랩(Living Lab)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① 다부처 R&D사업에서는 현장 적용 및 문제해결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D사업 기획 시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실용화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또한 다부처 R&D사업 추진 시 부처별 사업 단위를 내역사업 이상으로 구성하여 예산배분·평가 등에서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②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추진 중인 R&D사업을 함께 묶어서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범부처 차원에서 사회문제 정의부터 사업화 및 제도개선까지 포괄하여 검토하며, 실증·실용화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③ 지역 단위 리빙랩에 대해서는 개별부처의 기존 사업 예산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 발굴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실용화 리빙랩 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형 R&D과제 선정 시 ‘대안경쟁형 R&D체계’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 조직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 사회문제해결형 R&D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거나 지역 과학기술혁신기금을 활용해 지역 사회문제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셋째, 사업예산 구조를 개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시범 적용한다. 사업구조 개편에서는 주요 사회문제영역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예산 심의 및 성과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구조 신설을 검토할 것이다(예시: 기초연구진흥, 우주개발진흥, 과학기술연구지원, 국민생활개선(신설) 등). 비즈니스 모델 시범 적용에서는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⁵⁾을 도출한다. 이어서 사업기획 프로세스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다부처 사업, 리빙랩 사업 등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 시범 적용할 것이다.

〈과제 3〉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긴급대응연구 예산을 마련한다.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 시⁶⁾ 적시에 원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기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긴급연구를 추진하되, 성과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게 된다.

둘째,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긴급대응연구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한다. 특히 행안부의 재난안전R&D범부처협의체에서 긴급대응연구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과기혁신본부 조율하에 관계부처 공동주관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이다. 긴급대응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속 지원(Fast track) 방안 도입 등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과제 4〉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에 대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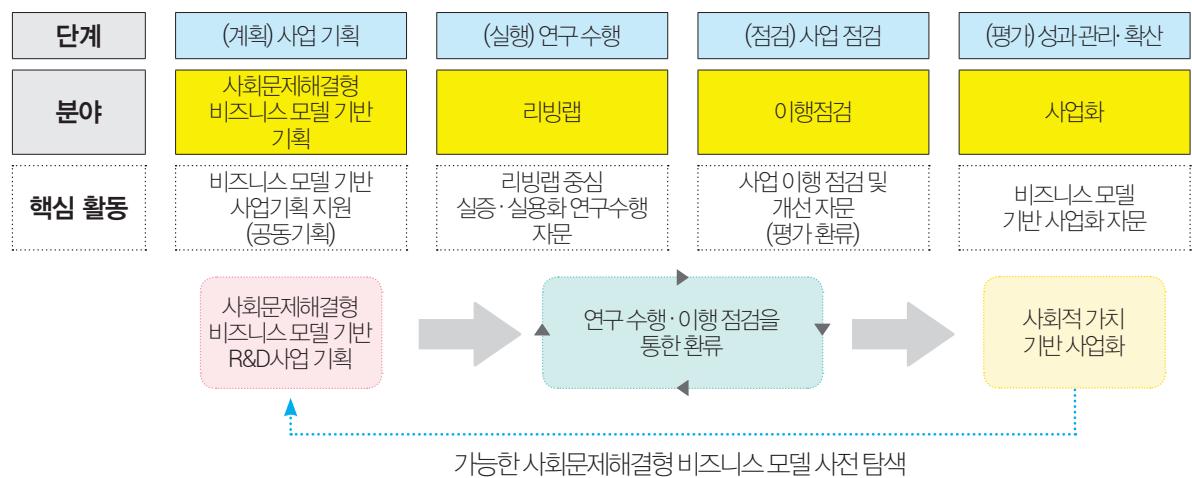
다부처 R&D사업 전주기에 걸쳐 컨설팅 하는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 실질적 사회문제해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그림1). 우선 다부처 특위에서 선정된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에 대해 사업 전주기 관점에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다. 사업단계를 사업기획, 연구수행, 사업점검, 성과확산으로 구분하고, 자문단 소속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맞춤형 자문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 실질적 사회문제해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 기여 정도를 중심으로 사업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평가에 적용할 것이다.

〈표3〉다부처 R&D사업 개선방향

구분	그동안	앞으로
사업유형	■ 중앙부처 중심(3개 부처 이상)	■ 지자체 참여 확대 (중앙부처 + 지자체)
사업 요건	사업 내용	■ 실질적 사회문제해결 중심 - 기술개발 + 실증·실용화 의무화 - 비즈니스모델 기반 사회적 활용·확산 연계
	추진 체계	■ 다부처협의회의 미구성 또는 운영 미흡 ■ 실증 단계에서 리빙랩 운영 미흡
	사업 최소 단위	■ 내역사업 수준 이상(3가지 유형) ① (세부) 세부사업 + 세부사업 + 세부사업 ② (혼합) 세부사업 + 세부(내역)사업 + 내역사업 ③ (내역) 내역사업 + 내역사업 + 내역사업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참여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며 이윤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고용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재투자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이 여기에 속함

〔그림1〕전주기멘토단 운영(안)



5)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정책적 미션 달성과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6) 재난·재해, 대형사고 발생 시 예산 미확보 상황에서 긴급 연구 추진이 필요한 경우

〈전략 2〉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한 플랫폼형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반시민, 사회적경제적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소통, 협력을 통해 개방형 문제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생태계 내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하고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사회문제해결 전담지원조직을 활용하여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과제 5)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첫째,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사회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일반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현장수요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표4>. 또한 사회문제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문사회계가 함께하는 연구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적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둘째, 사회문제해결 유관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즉, 국민참여 방식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 부처·지자체의 유관 조직⁷⁾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과 출연(연) 간 소통채널을 제공한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에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술 활용 역량 제고와 사업화 지원할 것이다.

(과제 6) 개방형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첫째, 국가사회문제은행(NSIB)⁹⁾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경로⁹⁾를 통해 사회문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회문제 세부 이슈별 원인, 이해관계자 맵, 해결방향 등이 포함된 심층분석 브리프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사회문제해결 R&D정책과 사업의 발굴 및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역량 축적을 위한 온라인 허브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온라인 허브를 통해 사회문제를 점검하며 이슈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¹⁰⁾ 간 상시적 온라인 소통과 교류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방안 발굴과정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 창구 기능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자원·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것이다.

(과제 7) 사회문제해결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 기반을 강화한다.

첫째, 문제해결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험·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사업별 추진 경험을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공유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교육전문기관(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과 온라인 교육채널(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¹¹⁾ 등)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연구자 등에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표4〉 일반시민 · 연구자 네트워크 조직(안, 예시)

조직	참여대상	활동내용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일반시민 + 전문가	지역현장 방문 및 인터뷰, 현장 이슈 조사 및 발굴
		사회문제해결방안 탐색, 정책대안 발굴 및 제안
사회문제연구회	과학기술계 + 인문사회계	상시적 소통 및 교류, 지식과 정보 공유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이슈 논의 및 대안 제시

7) 예시: 행안부 스스로해결단, 서울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8) NSIB: National Social Issue Bank

9) 국민참여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

10) 일반시민·사회적경제 조직·연구자기업 등

또한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학문화 프로그램¹²⁾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다.

(과제 8)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를 운영한다.

첫째, 정책센터는 종합계획 추진과제의 이행을 전담 지원한다. '국민 생활(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운영을 실무 지원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예시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사회문제연구회 등)의 구성과 활동을 뒷받침 할 것이다. 또한 국가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하고, 관련 지원과 지식에 대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허브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우수사례와 성과 홍보, 사회문제해결 연감·백서 발간, 국제협력 추진 등 사회문제해결 성과의 사회적 활용과 확산을 도울 것이다. 둘째, 정책센터는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전략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기반 구축과 활성화 연구를 수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마련 등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 추진을 뒷받침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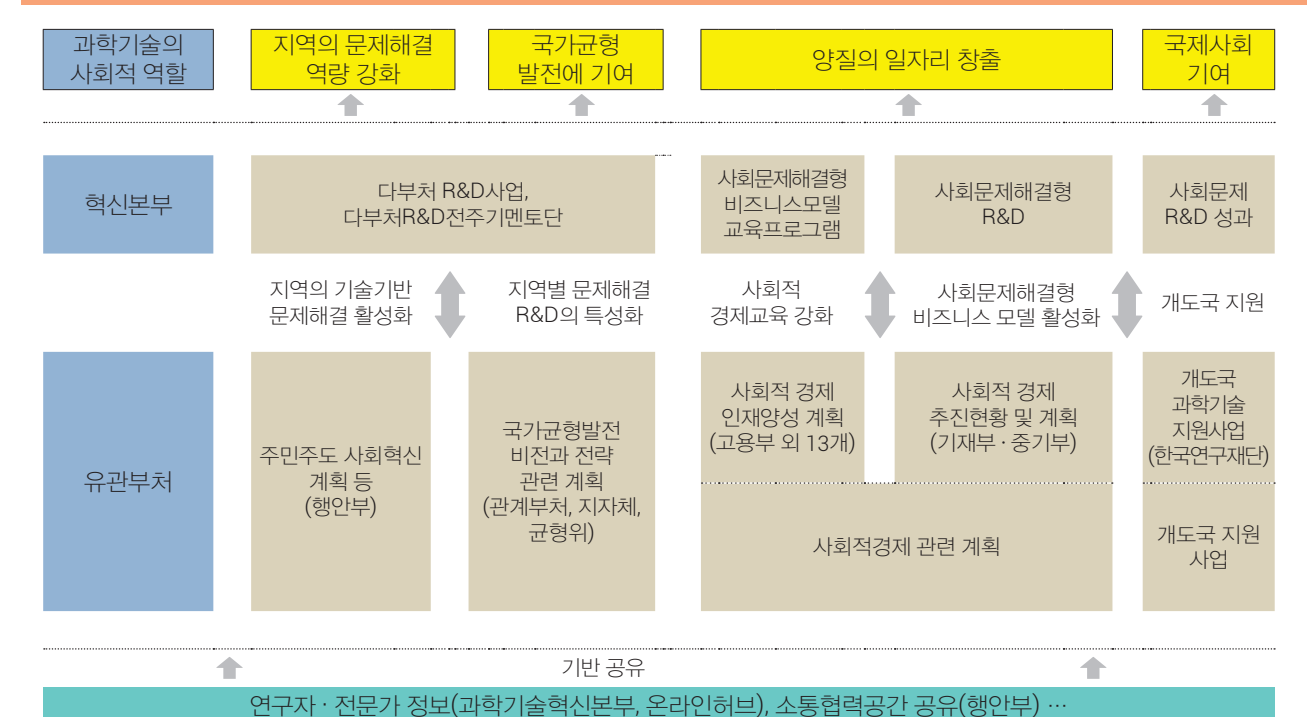
〈전략 3〉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성과 창출과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문제해결역량 강화,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서 과학기술 정책과 유관부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 R&D 연구성과의 대국민 체감 기회 확대, 우수 연구성과의 판로 지원 강화,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공유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과제 9) 사회혁신¹³⁾과의 결합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한다.

첫째, 사회혁신 정책¹⁴⁾과 지역문제해결 정책¹⁵⁾과의 협력 강화로 ‘지역’ 사회문제해결을 지원한다. 행안부의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¹⁶⁾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정기토론회를 여는 등 사회혁신 정책

[그림2]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정책과의 연계 예시



11)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

12)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성과를 활용한 교실 밖 과학교육(지역주민을 위한 버스킹), 과학예술 프로그램, 체험(캠프) 프로그램 등

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과 R&D수행 부처·기관과의 매칭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해결R&D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R&D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¹³⁾과의 연계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문제해결R&D 성과 실증 및 확산 단계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¹⁴⁾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사회문제해결 연구성과의 해외 이전과 확산 지원을 통해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그림2].¹⁹⁾

(과제 10) 대국민 성과 체험을 강화하고 문제해결 우수성과를 확산시킨다.

첫째, 연구성과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온라인을 통해 사회문제 연구성과를 읽기 쉬운 콘텐츠 형태로 공유하고, 전시회, 박람회 등 사회문제해결 R&D 성과 체험 행사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판로 지원과 법·규제 개선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촉진한다.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으로 도출된 우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R&D 바우처 등을 통해 판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기여 우수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성과를 온라인 허브에 공개하여 민간 기업에 관련 정보가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사회문제해결R&D 특성을 고려한 관련 법과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증·실용화뿐만 아니라 성과의 활용(인증, 표준화 등)과 공유를 촉진할 것이다.

4. 맺음말

본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였다. 전략 수립과 추진과제 도출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문제영역을 기존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하여 사회문제 전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R&D사업의 범위를 실증단계까지 의무화하고 부처 간 종합적인 연계 조정이 가능한 추진체계를 만들어 실질적 문제해결과 정책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소통 창구와 국가 사회문제은행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공유하여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였다<표5>.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34개국 중 7위, 과기정통부 COSTII)과 사회혁신역량(29개국 중 12위, EIU SII)은 높은 편이나, 삶의 질(34개국 중 29위, OECD BLI)은 상대적으로 낮다²⁰⁾.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나라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삶의 질 기여도가 높고, 과학기술혁신역량과 사회혁신역량의 관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¹⁾. 이에 본 종합계획이 향후 5년간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과학기술이 사회혁신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국가 경제 규모에 걸 맞는 국민 삶의 질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표5〉 1차·2차 종합계획 비교 및 개선효과

구분	지금까지는 (1차 종합계획)	앞으로는 (2차 종합계획)	개선효과
문제	■ 10대 분야 30개 사회문제	➡ ■ 40개 사회문제	■ 사회문제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
주체	■ 중앙정부 위주 ■ 연구자 중심	➡ ■ 지자체 참여 ■ 시민,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 정책 수용성 제고
목표	■ 기술 개발·확보 중심	➡ ■ 실증단계까지 의무화	■ 실질적 문제해결
추진 체계	■ 부처별 분산 추진	➡ ■ 부처 간 종합 연계·조정	■ 정책 추진동력 및 효과성 확보
긴급 연구	■ 지원 곤란 또는 장시간 소요	➡ ■ 지원 가능	■ 적시 대응
정보 공유	■ 없음	➡ ■ 온라인 창구 ■ 국가사회문제은행	■ 노하우 축적·공유로 문제해결역량 강화
역량 지원	■ 없음	➡ ■ 교육·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이 사회문제해결에 능동적 참여

참고문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2018~2022)(안), 2018.6.29.

13) (일반적 정의)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와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송위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한울아카데미)
14)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계획(행안부, `17) 등
15)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기정통부, `18) 등
16) 주민-활동가가 모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프라인 플랫폼(행안부, `17)
1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고용부 등 13개 부처합동, `18) 등
18)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중기부, `18),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기재부·행안부, `17) 등
19)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과기정통부):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지원, 글로벌 문제해결 등 개도국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공동문제 해결 지원
20)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II(Social Innovation Index, 사회혁신지수), BLI(Better Life Index, 보다 나은 삶 지수)

21) 이승규·용태석·김진경(2018)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KISTEP ISSUE Weekly 2018-27